

## 2020 고위급 정치포럼 NGO 그룹 입장문서(Position Paper)

### 서문

세계적으로 확산된 코로나로 인해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시급한 연대가 강력하게 필요해지고 있다. 역사상으로 특별한 이 시기에 우리는 국가, 경제, 건강, 안전이 어떻게 본질적으로, 그리고 불가피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게 되었다. 우리는 사람들이 연대할 때 무엇이 가능해지는지 알게 된 한편, 사적 이익이나 국가주의가 사람과 지구보다 우선될 경우 일어날 수 있는 끔찍한 결과 또한 목도하고 있다. 의제 2030 을 달성하기 위해서, 생명을 구하고 포용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서로 협력하여, 전환의 길이 우선되도록 해야 한다.

시민사회단체들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달성하기 위해 어떻게 전환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보면, 다양한 포용과 이해관계자 참여 사례를 보게 된다. 지역/국가/국제차원 시민사회단체들의 역동적인 생태계 안에서 프로그램 설정, 맥락, 영향, 상호 유익한 성과들에 대해 교훈을 얻을 수 있다. 더구나 긴급조치로 주체적인 목소리들을 억누르지 말고, 대신 사람들과 지역사회가 우려사항을 제기하고 스스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본 입장문서는 <2019 글로벌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 '글로벌 보고서')의 6 대 핵심전환분야를 기준으로 해 전세계 다양한 시민사회단체들의 경험과 제안을 모아놓은 것이다. 글로벌 보고서에서 각 분야별로 다뤄야 할 지속가능발전 세부목표들을 복합적으로 제시해 놨지만, 시민사회단체들의 활동과 영향은 각 분야의 경계를 더 많이 넘나들고 있어서 지속가능발전의 본질이 상호연계성에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인간웰빙 및 역량강화" 분야와 관련한 실천이 "지구 환경 공공재" 분야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경제로의 전환" 분야에 대한 프로그램은 "지속가능한 식량 시스템"의 변화 이론에 기반할 수 있다. 즉, 시민사회단체의 가장 영향력있는 행동은 부문적이고 독자적인 전략들의 경계를 흐릿하게 해서 여러 분야들을 서로 연계했다는 것이다.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은 특정 전환 분야의 형태를 통해 달성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절차를 통해 일하는가 하는 것도 똑같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시민사회단체 그룹은 다음과 같은 글로벌 약속을 요구한다.

-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지역의 역량, 지혜, 문화, 실천을 평가하고 강화하는 지속가능발전 이행 과정에 모든 이해관계자들을 포함한다.
- 지역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공동체가 지속가능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 종합적이면서 여러 분야에 걸친 실천을 우선한다.

- 우리가 실천할 때 모든 생명-인간, 동물, 생물권-이 자연과 균형을 이루어 번창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 복잡하고 변화하는 상황과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지원 시스템을 유연하고 적응성 있게 구축한다.
-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보 및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개방하며 부문간, 행위자간 소통을 개선한다.
- 긴급상황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면서 장기적으로 해결책을 찾고 복원력을 구축하기 위하여 국내 및 국제간, 모든 수준 및 부문간에 협력한다.

현재 우리는 코로나 뿐만 아니라 진정한 지속가능발전을 이룩하는데 지속적으로 장애물에 맞닥뜨리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이 지속가능발전 실천을 하는데 가장 큰 장벽은 빈곤이라는 경제적 장벽, 지속가능발전 실천 자원 부족, 인식 부족, 교육격차, 효과적인 정부정책의 부재, 실천과 책임에 대한 정치적 의지의 부족이다. (부록 1 참고)

전환을 위한 실천은 충분한 정보를 가진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통해 가능하고, 지역적 맥락, 전문성, 분리통계 및 데이터, 적절한 재정지원체계, 효과적인 프로그램 조정이 강력하게 조합되어 이루어질 때 촉진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항들과 의제 2030 달성의 핵심은 포용성, 지역적 참여, 인권을 기반으로 협력하려는 노력 그리고 자연과의 공존이다.

시민사회단체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이루는 과정 속에서 직면하였던 한계와 극복책 그리고 여러 경험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아래 각 섹션은 글로벌 보고서의 6 대 핵심 전환분야 분류에 기초한다:

Section 1. 인간웰빙 및 역량 강화와 모든 형태 및 차원에서 빈곤 퇴치

Section 2.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충격에의 대응, 경제성장 재개, 경제이익 공유, 개도국 재정위기 해소

Section 3. 지속가능한 식량체계 및 건강한 영양 패턴 구축: 기아 해소 및 모두를 위한 식량안보 달성

Section 4. 저탄소 에너지 및 보편적 에너지 접근성 달성

Section 5. 지속가능한 도시 및 근교 개발 추진 및 지역 실천 촉진

Section 6. 글로벌 환경 공공재 보호

Section 7. 전환 실천을 위한 자원 마련

Section 8. 누구도 배제하지 않기 위한 이행 과정과 한계

## Section 1. 인간 웰빙 및 역량 강화와 모든 형태 및 차원에서 빈곤 퇴치

### 개관

코로나 대유행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상황과 빈곤이 SDGs 달성과 관련된 문제들을 어떻게 악화시키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는 고착화된 빈곤, 식량의 불안정성, 보건의료·깨끗한 물·위생·에너지·주거에 대한 접근성 부족, 불평등한 교육 및 노동의 기회, 기후변화, 열악한 대기질, 차별, 사회적 갈등, 제도적이고 일상적인 인권 침해 등이 포함된다. 이렇듯, 중복되고 얽힌 문제의 중심에는 인간의 삶, 자연계, 그리고 상호 연결된 생태계가 있다.

인간의 웰빙 강화와 빈곤 감소 분야와 관련된 시민사회단체는 해당 분야에 국한된 사례보다 상호 연계된 시스템들에 대한 사례를 제시했다. 예를 들어, 우간다의 시골 의료원에 전기를 공급하고 처음 엄마가 된 주부들에게 가정용 태양광을 제공하는 사업(SDG7)은 여성의 역량 강화(SDG5)와 교육적 영향(SDG4), 실내 대기 오염(SDG13) 및 경제 안정성 지표(SDG1)뿐만 아니라 전문 조산사가 참여한 출산율과 산모 및 영유아 건강 지표(SDG3)를 개선하고 있다(Let There Be Light International).

110 여 개국의 에코 빌리지 공동체는 자연 기반의 해결책,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 유기적으로 재생산 가능한 농업을 채택하고 있다. 농업 생산성의 증대, 탄소의 분리, 건강하면서 친환경적이고 기후 친화적인 채식 식단의 섭취, 물 사용량의 감소, 재생가능 에너지 대부분의 자체 생산, 생물학적 폐기물처리 과정을 이용한 귀중한 자원 생산, 황폐화된 생태계와 자연적인 물 순환 복구가 목적이다. 그 과정 속에서 에코 빌리지는 공동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건강과 복지를 크게 증가시키는 동시에 모든 사람들의 기본적인 필요(needs)가 충족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The Global Eco-Village Network).

아이티에서 소녀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목표로 시작된 프로그램은 청소년기 소녀들의 교육뿐만 아니라 신체적 건강, 정서적 회복력, 인지 발달 및 지역사회에의 참여 등 그들의 복지 측면을 다루기 위해 다각적인 지원과 파트너십을 추진하고 있다(LIDE Foundation). 또한, 여성은 난민 교육의 개선뿐만 아니라 녹색 경제체제에서 생계문제를 개선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NET Africa).

또한 시민사회단체들이 정책 제안 활동과 실천을 하는데 연대한 사례들을 볼 수 있다. 환경보호, 정보공개, 지속가능한 순환 경제 채택 요구, 자신의 삶을 결정짓는 의사결정에서 배제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집단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인간의 삶을 개선시키고 있다(Gestos, Commons Cluster, UGENCI, RIPESS, African Climate Policy Center, and Bridge 47).

시민사회단체가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함에 따라, 교육의 전통적인 의미가 확장되거나 역량강화가 보다 광범위하거나 종합적인 교육과정으로 인식되고 있다. 정보 및 데이터 접근성 향상으로 인권이 개선되는 동시에 투명성, 부패 정도, SDGs 이행 정도를 모니터링 하는 새로운 수단이 되고 있다(Global Forum for Media Development, Gestos). 전통적 생활 방식을

가르침으로써, 소외 계층의 사람들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보전 교육을 하고 환경보호 및 기후 회복력을 촉진하는 전통적 지식의 가치를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Silambam Asia).

전반적으로 SDGs 이행이 진전하는데 문화적 지식과 그에 대한 존중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ICOMOS). 이주민과 난민을 대상으로 한 기술훈련을 강화하자 역량이 강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와의 관계도 개선되었다(Association Nationale des Partenaires Migrants). 몇몇 사례에서 세계시민의식과 SDGs 교육은 비공식 교육 형태로 단체, 공동체, 또는 청년 조직에서 이루어졌으며, 그 때문에 기술이나 지식이 쌓이고 보다 지속 가능하고 탄력적인 삶으로 이어지는 전환적인 행동으로 나타났다. (The Millennials Movement, Salesians Missions, Bridge 47)

### 인간웰빙 강화를 위한 전환의 특징과 실천

시민사회단체들이 공통으로 보여주고 있는 전환적 행동의 중심에는 하나의 공통된 원칙이 나타났는데, 사람들이 스스로의 복지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시민사회단체 활동은 공동체 중심적이고, 지역적으로 실행 또는 주도되었다. 그렇기에, 지역 행위자들은 프로젝트 내 의사결정, 계획 및 집행 단계에 포함되었다. 지역 주도적이며 사람 중심적인 활동을 통해 역량이 강화되었으며, 지역적이고 전통적인 지식이 지속 가능하고 혁신적인 사업이나 기술로 통합되었다. 전반적으로,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이슈들이 대두되고 있는 반면에 보다 지속 가능한 세상을 가져올 수 있는 지역의 지혜가 글로벌 차원에서 공유되고 있다.

지역의 지혜는 다음을 통해 달성되었다.

1. 여성과 소녀, 인종, 민족 또는 종교적 소수자, 사회 경제적 지위가 낮은 자, 원주민, 이주민, 난민, 강제 철거민, 장애인, 어린이, 청소년 및 노인, 성 소수자 등 복지 사각지대에 있으면서 역량을 발휘할 기회를 얻지 못한 자들과 지역 사회의 제안, 참여 그리고 리더십
2. 인간 웰빙과 빈곤 감소를 위한 사업을 사업 지역 공동체 일원들이 직접 할 수 있도록 넘기고, 이를 위해 지역사회의 역량강화가 필요할 경우, 그들의 생활과 지역 사회를 개선하는 능력을 강화하는 교육, 훈련 또는 기술 제공
3. 종합적이고 다면적 접근 방식 적용; 파트너십 및 다자 간 협력
4. 변화하는 상황과 필요에 맞춰 유연하게 적용 가능한 지원 시스템 구축
5. 즉각적인 필요를 지원하는 동시에 장기적인 해결 방안 구축과 기술 및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함.
6. 사회 및 사회 요구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세분화된 데이터 보유
7. 문화, 전통 지식, 환경에 대한 존중을 기반으로 지역 문화 및 여건과 행동의 맥락적 연결
8. 건강하고 번영하는 자연 환경과 균형을 이루며 생활함으로써 인간의 복지 보장

## 인간 웰빙 강화와 빈곤 퇴치를 위한 한계 및 과제

시민사회단체가 직면한 인류 복지 역량 강화와 빈곤 감소의 한계는 3 가지로 우선 구분되는데, 기본적인 필요의 부족, 교육의 장벽 또는 부재, 정부의 지원이나 다자간 협력의 부족이다. 격차나 장벽을 야기하는 것으로 가장 자주 언급되는 필요는 깨끗한 물과 위생, 청정에너지원(혹은 에너지원 자체)에의 접근, 충분하며 지속 가능한 식량, 안전과 치안, 기본적인 인권이다. 교육의 접근성이 떨어지거나 초등 교육으로 한정되었을 때, 인간 웰빙과 빈곤 종식을 달성하는 데에 한계가 되었다. 하나의 주제로도 분류 가능한 도전과제는 협력인데, 정부와 시민사회 간의 협력 부족, 다자간 협력 부족, 비포용적 정책 수립, 지역사회 기반 또는 다면적이고 다차원적인 사업에 대한 불충분한 지원,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보다 단기적인 이득을 우선, 세계적 분열을 들 수 있다.

## 고민할 사항

인간 웰빙에 대한 한계들은 시민사회단체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다:

1. 포용, 부문 간 협력, 다자협력의 장벽을 허물기 위해 시민사회단체는 어떻게 더 잘 연대할 것인가?
2. 누구의 목소리를 아직도 듣지 못하고 있는가?
3. 행동을 결정짓는 데이터에 모든 사람이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어떻게 더 잘 보장할 수 있을 것인가?
4. 어떻게 그들의 목소리를 의사결정에 반영하고 그들이 직접 이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 제언

만약 인간 웰빙 강화와 빈곤퇴치의 주요 장벽이 포용성이 부족해서라면,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고 그들에게 내재된 강점과 맥락적 지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과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시민사회단체는 유엔 기구들과 회원국들이 다음과 같은 사항에 약속해주기를 요청한다.

1. 안전하고 깨끗하며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을 포함한 모두를 위한 인권의 보장; 모든 형태의 차별, 이방인 혐오, 편협성 제거; 차별적인 법, 정책, 관습의 철폐; 이러한 관점에서 적절한 정책과 입법 및 조치를 촉구
2. 지역 차원의 실천 현황을 파악하고, 지역 사회와 소외된 사람들이 그들의 필요와 우선순위를 스스로 규명해 SDGs 달성을 위한 의사결정, 계획, 실행, 모니터링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

3. 의사결정을 알리고 프로그램을 향상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의 제공과 데이터 세분화 추진
4. 교육 정책 및 교육 능력 차원에서, 공식적·비공식적 평생 학습 수단을 인식하고, 기술 숙련 및 재훈련 등 성인 교육을 위한 국가 재정과 구조를 보장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과 세계시민의식 교육을 지지
5. 지속 가능한 해결책 모색을 위해 과학 및 학계와 협력하며, 동시에 공동체에 존재하는 토착 지혜를 고려
6. 복원력을 강화하는 지역 주도 장기 개발 계획을 인류가 직면한 위기에 대한 단기 대응책에 통합
7. 부문 간 정보 교류 및 자원 연계를 위한 체계를 개선하고, 부문 간의 접근을 통해 여러 SDGs 에 영향을 미치는 프로젝트와 활동을 위한 자금을 증대
8. 정보 및 데이터의 투명성과 접근성을 보장
9. 적절한 지속가능발전 재원을 위한 자금 조성 약속을 지키고, 부채상환보다 장기적인 인간 및 환경 웰빙과 전염병으로부터 지속 가능한 회복을 우선시
10. 의제 (의제 2030, 파리 협정, 베이징 행동강령, 안전한 학교 선언, 센다이 강령, 이주 글로벌 콤팩트 등) 전반에 걸쳐 상호 시너지 및 연계성을 파악하는 작업을 지속하고, 의사결정 또는 정책 수립 시 이러한 의제를 체계적으로 해소
11. 모든 사람의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연대

## Section 2.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충격에의 대응, 경제성장 재개, 경제이익 공유, 개도국 재정위기 해소

### 개관

2020 년 세계는 갑작스럽고 치명적인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해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아직 코로나 대유행에 따른 영향이 완전히 파악되고 있지 않지만, 당면한 의료 비상사태를 넘어, 코로나로 인한 장기적인 결과는 각 국가 및 기관들에게 기존 경제성장 모델의 기본 조건들에 대한 근본적인 재평가라는 과제를 남겼다.

그러나 코로나 대유행으로 동점골이 된 것은 아니다. 실상은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해 현 경제 모델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불평등과 취약성이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으며,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 가장 가혹한 상황에 처해 있다. 사실상, 코로나 대유행에 대한 전 지구적 대응으로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다'라는 약속을 재차 강조해야 한다. 세계보건기구(WHO)와 국가 정부가 세계 각지에서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보편적 의료 및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엔과 회원국 정부들은 다국적 협력을 주도해야 한다. 보편적 의료 및 사회복지 서비스는 개인의 법적 상태, 연령, 성별, 장애 유무나 정체성에 상관없이, 추방 또는 구금, 불법화, 착취 또는 학대에 대한 두려움 없이 동등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그리고 보편적 의료 및 사회복지 서비스의 과정은 투명하고, 포용적이며, 공정하고, 책임감이 있어야 한다.

게다가, 지난 40 년 동안의 경제 모델에 대해 해결해야 할 보다 심오한 문제가 있다. 많은 사람들을 절대 빈곤에서 벗어나게 하는데 진전을 보인 반면에 세계 인구의 대다수의 불평등 수준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최근 많은 연구들을 보면, 불평등이 어떻게 발전을 저해하고, 기회를 감소시키며, 혁신을 둔화 시켜왔는지 강조하고 있다. 경제력이 소수에게 점점 더 집중되고 기술 진보의 이익은 불공평하게 분배되었다. 나아가 인류가 환경파괴 없는 경제성장에 실패한 채 사회적, 환경적 비용을 대가로 한 성장 패턴을 지속하면서 자연에 대한 착취는 계속되고 있다.

세계는 중대한 전환점에 도달했다. 이제는 사회 및 환경 복지를 아우르는 건강한 사회와 성공을 가능하는 다른 방식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요구가 충분히 인정되고 있다. 더 건강한 인류의 미래와 번영하는 지구를 보장하는 장기적 계획과 회복력에 중점을 둔 모델을 고려하고 우리의 접근 방식을 다시 생각해야 할 중요한 기회의 순간이다.

이러한 재 발상은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계획과 실행 과정에 참여하고, 문화·사회·환경 규범과 관행을 존중하며,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방법을 찾는 것에서 비롯된다. 또한, 자연에 기반한 해결책을 지지하고, 모든 개발에 환경 및 사회적 보호조치가 기본적으로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안적인 모델들은 미래 경제가 실현 가능하고 더 지속 가능한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저탄소의 짧은 가치 사슬(low carbon short value chain)에 기반한 접근은 경제의

지역화를 가능하게 하고, 이는 기후변화 대응과 고용창출로 이어질 것이다. 동시에 연대 경제 모델(solidarity economy model)은 과잉 생산과 소비, 손실과 낭비, 자원의 상업화와 단절하는 인권 기반의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 보다 광범위한 사회 및 환경적 영향이 장기적인 계획에 포함되도록 이러한 접근 중 많은 부분을 다른 많은 경제분야에 적용할 수 있다.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한 지역차원의 소규모 자금지원이 인류 및 지구의 광범위한 번영을 추진하는 데 기여를 하고 있다. 한 가지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동아프리카의 맹그로브숲 복원 사업을 위한 직접적인 자금 조달이 있다. 맹그로브 나무의 잎, 목재, 뿌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많은 이익을 줄 뿐만 아니라 다른 생물의 서식지를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잎은 약용으로 수확될 수 있고, 꽃은 꿀벌이 살아가는 데 쓰일 수 있다. 이와 동시에 맹그로브숲 주변의 생태계는 썰물 때 진흙 속이나 모래톱에서 새조개, 굴, 조개를 채취하고, 새우잡이, 양어장 및 수산 양식을 하는데 이상적인 서식지를 제공한다. 환경 및 연대 경제 모델에서는 완전한 지속가능한 세상으로 넘어가는데 정부와 시민사회단체가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한다.

## 전환의 특징과 실천

전환을 위한 실천을 하는데 정부와 다자 그룹이 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주요 단계가 있다. 여기에는 중·저소득 국가에 대한 부채 탕감, 재정 부담 경감 메커니즘, 보편적인 공공 의료와 사회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규모 원조 투자가 포함된다.

우리는 취약한 경제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지원해야 한다. 이는 글로벌 복구 기금을 설치하고, 국가기초생활보장 구축 등 모든 국가마다 보편적인 사회보호 혜택과 안전망이 완전히 실현될 때 가능하다.

경제부양정책은 화석연료 기반 산업에 대한 보조금을 철회하고 지속가능한 21 세기형 일자리를 수백만 개 창출할 수 있는 부양책을 펼쳐 미래 경제가 지속 가능하고 공정 하도록 해야 한다. 유엔 사무총장과 여러 사람들은 “더 나은 재건”을 약속하고, 깨끗하고 자연 친화적인 재생에너지 및 자연 기반 솔루션을 포함한 녹색 경제로 재건하기 위해 연대해야 한다.

## 과제

전환적 변화를 방해하는 주요 장벽들을 넘어서는데 중요한 도전과제들이 남아있다.

SDGs 의 전환적 의제를 이행하기 위한 정치적 의지와 약속이라는 중대한 문제가 있다. 많은 국가의 정치인들이 선거와 주요 정치후원자들, 예를 들어 화석연료산업계 등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지원 때문에 전환적 변화를 시도하는 것을 꺼리는 것으로 보인다. COVID 19 는 경제, 사회, 환경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많은 정부에 더 많은 압박을 가하고 있다.



많은 나라에서 부패와 탈세는 중대한 문제이다. 주요 기업들이 회사가 소재하고 있는 국가에 적절하게 세금을 내고, 독립적인 사법부를 통해 구조적인 부패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동시에, 엘리트나 기업의 이해에 따른 개발과정, 또는 SDGs 의 목표나 국민의 필요를 고려하지 않는 정부당국에 의한 구조적 불평등이 있다. 그리고 문화적 또는 차별적 장벽으로 인해 때때로 자금의 분배 또는 사업 우선순위에서 불평등이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코로나가 대유행하면서 경제적 기회 부족에 대한 문제가 커지고 있다. 재정지원이 사회의 가장 소외된 사람들의 필수적인 활동에 가지 못하는 현실적인 위기가 있다. 10 년의 실천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SDGs 달성을 위해 지역공동체 주도 활동에 직접적인 지원을 보장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 고민할 사항

우리가 고려해야 할 두 가지 핵심 질문은 다음과 같다.

1. 기술은 과연 부의 집중을 심화시키는 것보다 사회를 더 평등하게 발전시키는 것에 기여할 수 있을까?

코로나 대유행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원격 근무와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가능하도록 한 기술에 그 어느때 보다도 상당히 많이 의존하게 되었다. 하지만 중요한 핵심 기술과 이를 뒷받침할 인프라에 대한 접근이 고르지 않기 때문에, 기술의 혜택이 소외된 계층에게 닿지 않을 수 있어 불평등만 더 악화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2. 정부, 국제금융기구, 민간 투자자들이 어떻게 더 협의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사회 경제적 계획에 대해 대화하려 하는 정부에 대한 좋은 사례들이 있다. 지금은 보다 광범위한 지역사회와의 대화와 시민모임들이 공정한 회복을 정의 내리는데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다. 정부, 국제금융기구, 민간 투자자들은 광범위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사회의 우선순위를 고려한 계획들을 평가해야 한다.

## 제언

모든 나라들이 코로나 대유행과 싸우면서 다음 단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함에 따라, 우리가 모두 함께 위기에 맞서 더 나은 세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정부가 공정한 회복을 약속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부담에서 회복하고 SDGs 달성을 위해 우리는 다음을 목표로 해야 한다:

1. 보편적인 의료서비스 지원-특히 예방접종 프로그램과 여성의 임신 및 출산 보건에 대한 전액 지원-과 인권 기반의 보편적 사회 보호 추진
2. 공정한 회복을 보장한 국가에 충분한 재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부채에 대한 책임사 및 가능한 곳의 경우 부채 탕감 및 채무 연기
3. 세계적으로 전쟁을 멈추도록 하고 각 국 정부가 군비를 사회보호비용으로 이전하도록 압박
4. 유해한 보조금을 제거하는 한편 진보적이면서 재분배적인 조세 정책을 채택하고, 부패, 탈세, 불법적 자금 흐름을 해결
5. 핵심 기반시설에 대한 교육, 훈련, 기술에 대한 장기적 재정지원을 보장
6. 자연 친화적 청정에너지, 녹색산업, 지속 가능한 일자리의 신속한 확장에 인센티브 부여
7. 경제정책 및 운영계획에 시민사회단체의 참여
8. 기업에 대한 긴급 재정지원 시 명확한 사회적, 환경적 조건에 기반한 총체적인 접근 보장. 예를 들어, 보다 지역적이면서 공정하고 복원력 있으며 환경적으로 균형 잡힌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노동자에 대한 공정한 대우, 생물다양성 보호, 탄소배출 감소 등

## Section 3. 지속가능한 식량 시스템 및 건강한 영양 패턴 구축: 기아 해소 및 모두를 위한 식량안보 달성

### 전환의 특징과 실천

지속가능한 식량 시스템을 위한 전환적인 실천은 역량 구축에 역점을 두어 지역차원의 해결책에 기반해야 한다. 많은 농촌공동체가 소외되어 있다는 점을 인지하면서, 사람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농업 인프라를 개발하려면 품질 개선을 위한 지원, 지속가능한 식량 시스템에 대한 동등한 교육, 그리고 정치적 및 경제적 의지가 필요하다. 이러한 점은 식량 생산 지역에 기후 변화 및 관련한 재난들이 미친 영향을 생각하면 특히 분명하게 드러난다. “전 세계 사람들의 적극적인 참여”라는 2020 의제에 따라 이해관계자들의 숙련 기술과 경험을 가져오고, 국가, 대륙별, 범 분야별 공동협력을 확보한다면 글로벌 식량 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하고 있는 코로나와 관련이 있다. 코로나 대유행은 지속가능하지 않고 규제되지 못한 야생동물 교역과 소비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저탄소, 짧은 가치 사슬, 그리고 지역 협력에 기반한 공동체들의 경우 큰 피해 없이 공동체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

### 한계

농촌의 가족농이 세계 식량 생산의 80%를 책임지고 있고 많은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위해 보조금과 같은 경제구조가 노동자, 환경 및 동물 복지에 대한 문제를 소외시키면서 농업 시스템 내 불공정 거래를 야기하고 있다. 기존의 발전 정도를 측정하는 방식은 지속가능하고 공평하며 인도적인 농업 발전보다는 불평등을 영속화시키는 산업화에 투자를 촉진시키고 있다. 투자는 현재보다 더 나은 대안을 만들기 위해 필요하다. 정치적 의지와 정책 구조 역시 식량 시스템을 개선하고 식량 주권을 확보하는데 장애물이 되고 있다. 여러 국가들을 보면, 소비자, 소작농, 노동자들을 소외시킨 채 대기업들이 식품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정책들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많은 나라의 정책 체계를 보면, 산업화된 농업 인프라 개발을 선호하고 있는데, 이는 선택된 소수의 경제적 이해를 다수의 경제 및 환경적 복지에 우선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다자간 협력의 부족, 식량정책개발 과정에서 소비자, 소작농, 노동자 대표성의 취약, 기술 진보의 저해, 음식물 쓰레기 해결 부족, 지방정부의 참여가 주요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식량 시스템에 대한 교육 장벽 뿐만 아니라 인식 부족으로 지속가능한 식량 시스템을 달성하는데 한계가 있다. 소비자들은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식품을 선택하기 위한 정보가 필요하고, 좋은 의사 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의미있는 제품 정보 표시가 필요하다. 또한 보다 공평하고 지속가능하며 인도적인 식량 시스템으로 전환되도록 생산의 모든 단계에서 모범 사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식량 시스템은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지속될 수 없다. 즉 자원이 충분하지 않다. 산업화된 농업, 특히 축산업은 기후변화, 산림훼손, 생물다양성 손실, 그리고 오염을 유발하는 핵심

요인 여겨지고 있다. 영세 농민들은 종종 자신들의 땅에서 도시 빈민가로 쫓겨나고 있다. 그와 동시에 환경 파괴가 증가해 농업 생산성과 식량 안보를 더욱 떨어뜨리고 있다.

## 고민할 사항

세계 각국이 환경을 존중하면서 기아를 종식하고, 식량 시스템을 개선하며, 식량 안보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사회단체가 여전히 직면한 질문은 다음과 같다.

1. 지구와 전 세계 인류에게 직면한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는 현재 시스템에 어떻게 진정한 구조적 변화를 줄 수 있을 것인가?
2. 어떻게 이러한 전환 모델들이 인권을 보장하고 유지하며, 진정한 사회통합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인가?
3. 코로나 19 가 불러온 파장으로 타격을 입은 경제를 되살려야 하는 상황에서, 데이터 세분화와 정부 및 국제기구 의사결정과정에서 대한 시민사회의 접근성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어떻게 우리는 작은 섬 국가들과 가장 배제될 가능성이 높은 국가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할 것인가?
4. 현재의 코로나 19 대유행을 감안 했을 때, 환경, 동물, 그리고 인간의 건강과 웰빙을 식량 시스템이 연계하도록 하면서 어떻게 '하나의 건강(One Health)/하나의 복지(One Welfare)'라는 접근을 주류화 할 수 있을 것인가?

## 제언

기아를 종식하고 생물권의 건강을 보장하는데 필수적인 지속가능한 식량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이 필요하다.

1. 보다 지속가능하고, 공평하고, 인도적인 생산품들을 생산하고 소비하도록 경제적 유인 정책 및 억제 정책의 수립; 육류, 가공식품, 설탕과 포화지방이 많이 함유된 가공식품 등 지속 가능하지 않고 건강하지 않은 식품에 대한 해로운 보조금과 세금 혜택의 제거
2. 근로자, 이주노동자, 소작농, 환경 및 동물 복지에 대한 보호와 규제 강화
3. 농토 점유권 및 농업 관련 주택 공급 보장
4. 문제의 실상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데이터 세분화 및 데이터 공유
5. 가장 소외된 사람들의 복지를 지원하고 개선하는 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정책 개발 시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보장
6. 소비자가 건강하고 지속가능하며 인도적인 식품을 선택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며, 지구 기후에 대한 부담과 농업에 대한 환경발자국을 저감할 수 있도록 소비자 교육과 인식 제고를 지원하고 확대
7. 동물복지와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고 소작농의 경쟁력을 높이는 모범 사례를 실천할 수 있도록 훈련 및 역량 강화 증대
8. 현지의 관행, 관습 및 고유 지식 터득

## Section 4. 저탄소 에너지 및 보편적 에너지 접근성 달성

### 개관

시민사회단체는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지역 사회를 교육하며, 에너지 접근과 인간 및 지구의 복지를 근본적으로 연결하는 지속가능 대응 정책을 수립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우간다의 외딴 농촌지역에서 기본적인 에너지 서비스를 받는 가구들의 사회적 투자 수익률(SROI: Social Return on Investment)을 살핀 한 연구에 따르면, 건강, 안전 및 생산적 편익을 고려할 때 40 배의 사회적 투자 수익률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촌 및 외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깨끗한 재생가능에너지로의 전환은 생계 활동을 창출했다. 그와 동시에 분권화된 재생가능에너지(예: 국소 전력공급시스템(microgrid))는 풀뿌리 차원에서의 복원력, 에너지 안보, 재난 위기 감소에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각 영역에서 일하다 보면 범 부문간 전환적인 활동을 만들어 낼 필요성이 점점 높아진다. 변화된 지구환경에서 의제 2030 을 달성하기 위해 시민사회가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저탄소 에너지 달성과 지속가능한 에너지의 보편적 접근을 위한 실천은 NGO 그룹의 집단적 지식과 힘에 달려 있다.

### 전환의 특징과 실천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위한 전환적 실천의 특징에는 상호 연계에 초점을 맞추고 각 부문을 조정할 실천에 재정지원을 증대하라는 요구가 있다. 예를 들어, 정책결정자가 물, 에너지, 식량, 기후를 연계하는 것이 전환적 계획이다. 이는 2030 의제의 상호 연계성을 이해하게 해 전략적 실천을 위한 메커니즘을 짤 수 있게 한다. 자원이 부족한 지역 공동체에 재생가능에너지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은 2030 의제 실천을 촉진하는 전환적인 노력으로 이미 입증된 바 있다.

중요한 생태계와 생물종을 보존하면서 에너지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상호 연계 사례로, 이동성 야생동물 보호 협약(CMS: Convention on Migratory Species) 에너지 T/F 팀의 활동에서 볼 수 있다. 버드라이프 인터내셔널(BirdLife International)이 주관하는 에너지 T/F 팀은 각 국 정부, 국제금융기구, 산업계, 학계 및 시민사회단체와 협력하여 재생가능에너지 개발을 철새 종 보존과 조화시키고, 강력한 환경 기준 및 보호조치를 개발하며, 관련 지침 및 도구의 사용을 지원한다. 이 사례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함께 일할 때 에너지 접근성과 지구의 안녕이 서로 거래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 한계 및 과제

에너지 접근의 형평성이 부족해 수억 명의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논의에서 뒤쳐지거나 소외되고 있다. 산업화 된 북반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중심으로 근무하고, 정치 참여와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반면, 전기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 인터넷은 빈 화면일 뿐이다. 안정적인 에너지 접근 없이는 일선 의료 종사자가 환자를 치료하고, 필요 물품을 위해 연락을 취하며, 데이터 취합 및 질병 완화 전략에 참여할 수 없다. 자원이 부족하고

전기 시설이 없는 지역공동체에 있는 시민사회단체들은 온라인 실무그룹에 참여할 수 없고,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없다. 또한, 안전 교육에 실무자를 참여시키기 어렵고 위기 극복하는데 필요한 의료물품에 접근할 수 없다.

혁신적인 SDG7 실천계획을 수립하는데 어려운 점은 경제학, 이해당사자 참여, 정책결정에서 비롯된다. 코로나 대유행이 보여주듯이, 모든 부문과 지역사회를 받아들이는 자세를 갖추지 않고는 주요 이슈를 다룰 수 없다. 예를 들어, 전체 진료소의 1/4 이 전력 부족을 겪고 있는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에서는 전기 시설이 없는 진료소에 전기 공급을 하기 위한 즉각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미래에는 신기술을 통해 이런 시설들을 위한 지속가능한 전력 공급원이 개발될 수 있을 것이다.

## 고민할 사항

저탄소 에너지를 달성하는데 해결되지 않은 질문은 다음과 같다:

- 지속가능한 에너지 접근이 가능할 경우, 건강, 안전, 교육, 여성의 권한 강화, 생산적 이용, 생물다양성 및 환경에 대한 계량 가능한 비용 편익은 무엇인가?
- 정책결정자들이 금융과 사회안전망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전기 없이 사는 5 억 8 천만 인구와 바이오매스, 비효율적인 요리용 레인지들을 사용하는 31 억 인구에게 어떻게 도달하게 할 수 있을까?
- 우리가 어떻게 재생가능에너지 시스템을 활용하여 에너지 생산 시 지구 한계층(planetary boundary),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보존, 수자원 보호에 대한 우려를 해결할 수 있을까?

## 제언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한 비상 대응 상황에서 우리는 전환적인 실천을 추진하여 정부의 대응책에 재생가능에너지가 우선 설계되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다음 사항을 요구한다.

- 생태계를 훼손하지 않고 최대한 많은 지역 사회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청정 에너지 프로그램이 추진될 수 있도록 범 부문 간 개입을 증대
- 청정한 재생가능에너지를 포함하는 지속가능 프로젝트에만 부양책 및 원조 지원금 포함
-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화석연료 보조금을 축소하고 재생가능에너지를 장려
- 생물다양성 보존 및 자연 기반 해결책을 악화시키지 않고, 긴급히 필요한 재생가능에너지 전환을 보장하기 위해 환경 및 사회적 안전 장치를 제공
- 병원 및 진료소에 청정 에너지 공급을 위한 보건의료 기금을 증대
- 가정, 학교, 기업, 공공 공간에 감당 가능하고 효율적인 에너지 접근성 보장

각국 정부가 코로나와 싸우기 위해 대규모 재정 투자를 약속함에 따라, 우리는 지속가능하지 않은 에너지에서 모든 부문에 걸쳐 깨끗하고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해결책으로 전환할 수 있는 특별한 국제적인 기회를 갖게 되었다.

## Section 5. 지속가능한 도시 및 근교 개발 추진 및 지역 실천 촉진.

### 개관

지역 차원의 실천은 SDGs 이행에 직접적인 전환 효과를 낼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지역의 강점, 자원, 전문성을 고집어내고 모든 사람의 권리와 이익을 존중하면서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의미있게 참여해 일을 하고 살아가는 방식을 전제할 때 그렇다.

17 개 SDGs 를 아울러, 지속가능한 도시화 및 농촌개발, 기후행동, 전반에 걸친 사회경제적 성과가 지역의 솔루션으로 차이를 보일 수 있는 핵심 영역이다. 그러나 실천하지 않거나 이익 또는 단기 성장을 우선시하면, 도시가 혼잡해지고 오염되는데다 기후를 변화시키고 농촌을 소외시키는 등 큰 대가가 따를 수 있다.

### 전환의 특징과 실천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지속가능한 도시 및 근교 지역 개발을 보장하는 전환적 실천은 다음과 같이 특징 지을 수 있다:

- 권리 기반 접근: 도시 및 도시근교 지역 개발의 맥락에서 이는 특히 토지 및 주택 관련 문제와 의료서비스, 교육, 수도 및 위생시설, 공공 공간, 도서관 등 공공 시설과 같은 공공 서비스에 대한 접근에 적용
- 생태마을, 공동체 농업 등 도시와 농촌, 자연과 사회 간의 상호작용을 고려한 통합적 접근.
- SDGs 의 지역화를 지원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하여 시민사회단체의 참여를 강화. 시민사회단체의 참여는 법과 재정을 통해 뒷받침될 필요
- 기존의 자산과 시설들을 효과적으로 활용: 단순히 건물이나 센터를 신축하기 보다 구(舊) 도심 구역 재생이나 도서관 등 시설을 활용하기 위한 노력 필요
- 정책에 문화와 전통 결합: 문화와 전통을 정책수립 과정에 적용해 가능성을 높이고 보다 많은 대중의 참여 보장
- 지속가능발전 교육을 통해 정책 수립 및 이행에 참여하는, 인식이 높은 공동체
- 모든 차원에서 효과적인 기관: 국가 정부의 효과적인 조정 메커니즘 지원과 SDGs 를 지역 실천에 통합할 수 있도록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및 지방기관들의 역량강화 지원. 모든 정부 및 공공기관은 효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 필요.
- 효과적인 데이터와 증거의 활용: 신기술로 이루어진 도구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존중하면서 현명하게 사용될 필요. 데이터는 지역 맞춤형 접근과 취약계층의 필요를 해결할 수 있도록 세분화될 필요.

자발적 지방정부 보고서(VLR: Voluntary Local Reviews)는 지속가능발전에서 시민사회 참여를 개선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

## 지속가능한 도시 및 근교 개발을 위한 과제

지역개발의 잠재적 강점 중 하나는 지속가능한 솔루션 마련하는데 행위자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모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항상 그렇지는 않다. 국가정부나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들이 목표 달성 계획을 실행으로 옮기지 않는 일이 너무도 흔하다. 또한 정부기관간 조정이 잘 안되어 문화를 상실하든가 훼손하는 등 서로 다른 양상의 개발 추진으로 이어질 때도 있다.

성공적인 시범사업의 확대 지원 등 보다 장기적인 고민과 계획수립이 필요하다. 보다 통합적인 도시화 정책을 통해 농촌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장기적인 영향까지 고려해야 한다. 이는 보통 데이터나 연구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경우이다. 유사하게, 많은 정부들이 시민단체의 안정적이고 유의미한 참여 방식을 제공하고 있지 않다. 잠재적인 협력자들-시민사회단체, 도서관, 경험이 많은 사람-이 참여를 못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시민사회단체들 스스로 협력할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유의미한 시민참여를 위한 고민이 너무 미흡하다.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를 만드는 것은 행동양식의 변화 정도에 크게 의존한다. 시민들이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시민참여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경우, 시민들은 정부의 사업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다.

## 고민해야 할 사항

지속가능한 도시 및 도시근교 개발과 지역 실천을 개선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데 발생하는 격차는 다음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는 것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1. 가용 가능한 모든 자산 뿐만 아니라 개발의 사회적, 환경적, 경제적 측면을 완전히 이해하고 고려해 얼마나 효과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가?
2. 국가, 광역, 기초 차원에서 지역 실천을 하는데 필요한 자원, 권한, 태도를 가진 구조나 기관들이 있는가?
3. 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써 개인을 참여시키거나, 그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권한을 부여하는 것에 의사결정자들은 얼마나 주목하고 있는가?

## 제언

지역 실천의 강점을 활용하고, 보다 포용적 과정을 통해 2030 의제를 달성하며, 기후변화 영향을 저감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도시 및 근교 개발을 이룩하려면, 다음과 같은 사항이 약속되어야 한다.

1. 지역적 특색과 자산, 문화를 인식하고 활용하여 지역차원에서 실천
2. 도시 및 근교 개발 전 단계에서 사람들을 참여시키고 환경을 고려
3. 리스크 정보 발굴, 위험성 측정과 같은 도구를 활용하여 회복력 계획 수립
4. 세분화되고 관련된 데이터 이용
5. 투명성을 통해 시민들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지속가능한 도시 및 근교 개발은 시민사회의 참여를 통해 굉장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를 비롯하여 보다 더 많은 국민의 참여를 이끌 수 있는 적절한 정부 및 공공기관과 적절한 태도가 있어야 한다.



## Section 6. 글로벌 환경 공공재 보호

### 개관

최근 몇 년 동안 지구 환경 공공재를 보호하고 복원할 필요성과 그 이점에 대한 인식이 점점 증대되고 있다. 식량 생산 증대, 빈곤 퇴치, 깨끗한 물, 기본 위생, 에너지의 공급,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에 필요한 자연자원, 지구 복원을 위해 자연 친화적인 솔루션들은 이제 필수적인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인류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훨씬 더 많은 통합성을 키워야 한다. 그리고 SDGs 달성에 기본인 포용적이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고 건강한 경제를 지지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이 SDGs 달성의 기본이다. 코로나 역시 현 사회의 자연 생태계와 동물, 특히 야생동물을 사용하고 관리하는 방식이 어떻게 세계경제와 더불어 인간의 건강과 복지에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야생동물, 서식지, 토지 등 자연의 본질적 가치를 인식하고, 과학적 지식과 이해로 어떻게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가치와 접근방식을 환경 공공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전환시킬 수 있고, 전환시켜야 하는지 고려하는 것이 시급하다.

모든 SDGs 의 실천과 진전의 촉매제로써 물의 중요한 역할을 인식하고 상호연결성을 강화하면서, 환경파괴의 흐름을 막고 재생 농업(Regenerative agriculture)과 지속가능한 어업으로 가능한 빠르게 전환하는 것이 필수이다.

자연 친화 솔루션들은—탄소 집적 자연 생태계의 보존과 복원— 2030 년까지 필요한 기후 완화 조치의 30% 이상을 감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후 변화 적응과 재해 복원력에 기여할 수 있다. 산림, 습지, 초원, 해양과 같이 손상되지 않은 생물학적 생태계는 특히 효율적이고 비용 효과적인 자연 친화 솔루션이다. 이는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고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함께 단일 수종 조림, 단일 농업, 단일 목축을 하는 것과 비교할 때, 온전히 생물다양성이 살아있는 생태계가 더 많은 탄소를 분리해 저장시키기 때문이다. 손상되지 않은 생태계는 또한 보다 탄력적이고, 기능적이며 온난화 된 기후에 적응할 수 있다. 환경 공공재를 보장하려는 전환적 실천의 예로, ‘하나의 복지(One Welfare)’ 접근 사례를 볼 수 있다. 하나의 복지 접근은 환경, 동물, 인간 생활의 조화로운 연결을 이용하려는 생태학적으로 지속가능한 공동체 및 생태마을, 인간, 동물의 복지가 상호 연계되어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다.

가장 시급하게 닦친 과제를 적절하게 해결하고 SDGs 를 달성하기 위해, 지구 공공재 및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교육이 필수적이다. 새로운 개념을 이해하고 지속가능한 생활 습관을 갖는 데는 실천적 학습이 핵심이다.

국제 사회는 순환경제로의 전환, 온실가스 배출 제로, 재생가능에너지 100%, 경제성장 억제, 환경 영향 감소, 지역 사회 회복력에 대한 투자 등에 집중해 포부를 키울 수 있어야 한다.

## 전환의 특징과 실천

자연의 성장을 직접 관찰해 보면, 우리가 가진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자연이 보통 어떻게 하나의 시스템을 번창시키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가올 대재앙과 전반적인 붕괴를 피하도록 유연하게 운영하는지 볼 수 있다.

생물 다양성 보전에 대한 금융 솔루션은 평화와 번영을 촉진하고, 금융 수익의 다양한 소스를 여는 수단을 제공할 수 있다. 금융 수익은 황폐화된 생태계를 보호하고 복원하는 자연 친화 솔루션에서 비롯되는데, 예를 들어, 맹그로브숲, 강, 산림, 습지, 연안 등 여러 취약한 생태계들을 들 수 있다.

사회연대경제(SSE: Social Solidarity Economy)는 지구 환경 공공재를 보호하는 또 하나의 방법으로써 효과성을 보여주었다. 이 모델에서는, 협동조합과 근로자의 소유권, 지역사회 서비스, 윤리적 은행, 지역 통화로 보다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경제 시스템을 창출한다. 사회연대경제는 생산과 소비의 순환적 경제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인간과 생태계 웰빙이라는 관점에서 성장을 바라본다.

SDGs 이행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역할이 상당히 저평가 되어 있다. 안타깝게도, 우리 정부와 국제기구들은 규모를 확대해 전체 지역을 전환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전략들을 수행하거나, 모범 사례와 전환적 사업을 채택해 지원하기 보다는 시범사업 지원을 훨씬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 한계

시민사회단체는 지속가능한 지구 공공재라는 결실을 얻는데, 2 가지의 엄청난 장벽을 경험했다. 하나는 정치적 의지의 부족이고, 다른 하나는 토지가치세, 보조금 개혁, 해외개발원조(ODA) 증대, 통화 거래수수료 등 새롭고 혁신적인 조세 수단, 탄소세 등 여러 기후금융제도, 기타 금융 혁신 등 가장 실현가능성이 높은 많은 금융 수단들의 추진 실패이다. 게다가, 환경영향에서 경제를 "분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45년 전, 글로벌 데이터가 구축된 이래 GDP 성장과 그 영향은 낮아지지 않았다.

## 고민할 사항

지구 환경 공공재를 보호하는데 진전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다음 질문에 답할 필요가 있다.

1. 가능한 신속하게 완전한 지속 가능성으로 전환하기 위해 취해야 할 전제 조건은 무엇인가?
2. 어떻게 하면 생물다양성의 가치에 대한 대중 및 정치인의 인식을 높이고, 생물다양성 가치가 정책, 경제, 일상 생활에 적절하게 통합되도록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생물 다양성 손실의 원인을 적절하게 해결하고 자연 친화적 솔루션을 지원할 수 있을까?
3. 어떻게 지구 공공재의 안녕과 아프리카 및 기타 최빈국, 특히 생물 다양성과 자급 자족 농업에 의존하는 지역 사회의 비공식 경제로 먹고 사는 사람들의 기본 필요 간에 균형을 잡을 수 있을 것인가?

4. 어떻게 동물학대 없는 축산업과 식품을 장려하고 촉진할 수 있는가?
5. 인간과 환경 문제의 교차점에서 동물도 감각이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고려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6. 어떻게 하면 이번 '수퍼 해'에 자연, 기후, 해양, 지속가능발전 의제 사이의 시너지를 확보할 수 있는 지, 그리고 제 75 차 유엔총회와 유엔총회의 한 부분으로 개최되는 유엔 생물다양성 정상회의에서 이에 대한 실천을 실질적으로 약속하게 만들 수 있을까?

## 제언

환경 공공재를 보호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할 일은 다음과 같다.

1. 유엔 생태계 복원 10 년 목표 및 전략과 더불어 올해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의 결과를 지지하고, 자연 기반 해결책과 재생 에너지로의 자연친화적 전환을 통해 국가 및 국제 환경법을 강화하고 집행하려는 노력을 지지. 또한 이러한 국제협약을 가능한 신속하게 이행할 것을 약속.
2. 기후변화 저감을 위한 실천, 지속가능발전, 기후행동, 재난 위기 감소 간 상호연계 및 이에 대한 인식 구축
3. 지속가능발전 교육을 국가 공식 교육 커리큘럼에 완전히 통합
4. 시민사회와 협력하여 생태학적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및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설계, 계획 및 이행에 재정 지원
5. 지속가능발전의 건강하고 지속적인 궤적을 위해 경제 성장을 자연시스템을 본뜬 자연적 경로로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을 평가
6. *지속가능발전*을 거버넌스의 기본 운영 원칙과 정부 의사결정의 핵심으로 채택
7. 지속 가능한 소비와 생산을 위한 지역 및 국가 계획의 수립, 생태계 복원, 생물다양성을 보호 및 유지, 빈곤 퇴치 약속을 이행. 이러한 약속들은 완전히 통합적인 방식으로, 수직적이면서 수평적으로, 이상적으로 하나의 총체적이고 통합된 국가 및 글로벌 지속가능발전 전략 및 계획으로 이행.
8. 각 국가 내에 해당 국가의 지속가능발전 프로그램 및 사업을 감독하고 조정할 책임이 있는 총괄 기관을 지정
9. 정부 재정이 완전한 지속가능발전으로의 전환 노력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도록 국가 및 지방정부의 예산 과정에 권한 부여.
10. 기후변화를 고려한 물 관리 수단 및 접근방법 개발, 물의 가치를 사회적, 환경적, 경제적 번영의 일부로 인식. 그리고 여성, 아동 및 청소년, 원주민, 기타 취약계층이 실천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고, 권리와 의무 주체임을 보장하는 인권 기반의 물에 대한 접근 방식 채택
11. 다양한 분야에 걸쳐 여러 혜택을 주는 공동체 기반 접근을 인식하고 지원하며, 시민사회와 정부 간의 파트너십을 강화

## Section 7. 전환 실천을 위한 자원 마련

시민사회단체와 시민사회는 점차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에서 중요한 파트너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가 SDGs 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조건과 활동이 국내외 후원금 기준과 조치들로 인해 심각하게 방해 받고 있다.

몇몇 사례를 보면, 단기적인 이익을 바라보거나 투자로 돌아올 수익을 다르게 기대하고 있는 기업, 혹은 상층의 특정 이해 권력 집단에 의해 기금이 장악될 수 있다. 게다가 활동이 범 부문간 협력에 기반할 때도 기금은 왕왕 단일 부문 또는 특정 하나의 SDG 달성에만 배정되고 있다. 이러한 행태는 때때로 국가 지원금에서도 나타나는데, 부패해서 정치적 이익이나 청탁과 관련한 사업에 지원금을 배정하는 국가들에서 볼 수 있다.

지역차원에서는 규모는 작지만 효과적인 활동과 프로그램이 지원금 체계 밖에 놓이게 될 수 있다. 왜냐하면 (1) 보조금 관리 경험의 부족, (2) 지원금에 대한 무지, 혹은 (3) 보다 통합적이거나 총체적(덜 단편적인)이며 장기적인 접근으로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나 보조금 요건에는 맞지 않기 때문이다. 위험을 회피하는 풍조 속에서, 이러한 상황은 때로는 풀뿌리 단체들의 활동을 간과하거나, 풀뿌리 단체들을 보다 잘 알려진 큰 단체들의 휘하에 놓이도록 한다. 후자의 큰 단체들을 통한 접근은 일시적으로만 지역 프로그램의 발전과 성공을 지원할 뿐이다. 역량 구축이라는 정신으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로 이런 행태는 소규모 또는 풀뿌리 단체들이 고급 경영 능력을 배울 수 있는 훈련을 부족하게 만들고, 경영에 대한 경험 및 전문성 부재를 심화시키며, 오로지 "선진국"의 단체들만 지원금을 관리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뿐이다.

SDGs 달성하기 위한 인식과 활동 방식이 좁고 편협한 시각에서 보다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방식으로 변화함에 따라, 지원금 역시 같은 방향을 따라야 한다. 이는 SDGs 및 파리 협정의 렌즈를 통해 재정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이며, 기업, 유엔 회원국, 국제금융기구, 유엔에 다음과 같은 통일된 노력을 요청한다.

1. 유의미하고 효과적인 부패방지 메커니즘의 시행
2. SDGs 달성을 위한 장기적이고 영향이 큰 프로그램에 재정 지원과 함께 전환적 노력을 강화하는 다 부문간 협업을 장려
3. 기후변화에 영향을 주거나 악화시키는, 혹은 인간, 생태계, 동물, 또는 지구를 위험에 빠뜨리는 산업계에 대한 보조금 철폐
4. 소규모 지역 프로그램, 이니셔티브 및 조직에 성공을 입증하도록 요구하기보다 재정 관련 지식을 제공하거나 향상시키고, 보조금 관리를 교육하며, 모니터링 및 평가 도구를 제공함으로써 보조금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고, 기존의 재정 지원 메커니즘에 대한 인식을 증대
5. 녹색 경제 또는 SDG에 부합하는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에 유리한 조건으로 감당 가능한 저비용 금융 접근성을 개선
6. 수요 결정, 지원금 배분에서부터 모니터링 및 평가에 이르기까지 재정 지원의 모든

- 단계에서 지역공동체의 의미있는 참여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 강화
7. 정부가 교부하고 관리하는 지원금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관리감독이 잘 안되는 지역의 경우, 지역 또는 광역 차원의 시민사회단체가 수행하는 큰 영향을 미치는 프로그램 또는 프로젝트로 재정 지원을 전환
  8. 효율성과 유효성을 극대화하는 공공금융기구를 설립하는 한편 회전기금, 신용증진제도와 같은 민간 자본을 촉진
  9. SDG 달성에 필수인 기본적인 안정성을 만드는 사회적 보호 기반을 구축
  10. ODA 약속을 이행하고 ODA 기금을 국가 안보 및 군사 또는 안보 공공 지출과 분리

최근 코로나 19 대응 자원 마련 포럼에서 단결된 노력을 통해 보았듯이, 우리는 SDGs 를 달성하기 위한 적절하고 공정하며 호응적인, 그리고 책임있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함께 협력할 수 있다.

## Section 8. 누구도 배제하지 않기 위한 이행 과정과 한계

코로나-19 대유행에 앞서 세계는 169 개의 지속가능발전목표의 대부분이 이행되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코로나-19 가 세계를 강타했을 때, 기존의 불평등 문제들이 더 많이 드러나게 되었다. 여성과 소녀, 아이들과 청소년, 노인, 장애인, 이주민과 난민, 원주민, 인종·민족·종교적 소수자, LGBTQI, 빈민층은 이미 어려움과 위험에 직면했는데, 이는 SDGs 의 완전한 실현을 어렵게 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과 위험에 이들을 더 취약하게 만들었다.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드는 데 누구도 배제하지 않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각자 자기 역할을 하고 있던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코로나-19 위기 사태는 단합된 행동의 필요성을 전면에 부각시켰다.

시민사회단체그룹에 참여하고 있는 구성원들이 제시한 사례를 보면, 이러한 단합된 행동의 핵심에는 신념이 있었음이 틀림없다. 사람들, 특히 가장 소외되고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가능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필요한 정보와 기술을 제공받는 권리 주체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정책과 그에 따른 조치들은 대개 실패할 것이고 지속가능한 진전으로 나아가지 못할 것이라는 믿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사회, 민간조직, 기업, 학계 또는 과학기술계와 국가 및 지방정부, 국제기구의 목표는 그들의 프로그램과 정책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과 반드시 협업을 구축하는 것이어야 한다. SDGs 의 핵심은 제안된 행동이 인류와 지구,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인식과 투명성이다.

그러나 전염병이 유행하기 이전의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목표는 현재 코로나로 인해 더욱 악화되었다. 비록 모든 회원국이 국제법에 따른 인권 규정을 가지고 있지만, 2030 의제를 이행과 함께 이러한 인권 규약의 준수를 보장하는 것은 주로 열망으로만 남아있다. 예를 들어, 성 평등(SDG 5)은 정책의 미사여구로 등장하기는 하지만 아직 모든 사회의 사회구조에 얽여지지 못했다. 게다가 “인종차별의 증가와 원주민 인권에 대한 지속적인 경시, 그리고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간성 등 성소수자(LGBTQI) 역시 지속적으로 박해, 폭력 및 전반적인 차별로 고통받는 모습”이 지속적으로 목격되고 있다(Gestos).

또한 예산배정 등 지역의 의사결정과정, 교육/인식 및 정보, 투명성 등 참여 민주주의의 격차도 지속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국민과 정부 간 다른 방향으로 흐르는 불신은 개인과 공동체를 뒤쳐지도록 만드는 장벽을 두텁게 한다.

코로나 대유행으로 기존 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많은 정부들은 포용과 완전한 순환 경제 정책보다는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민간 부문과 강력한 시장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 여러 장애물 중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다는에서 우리가 여전히 직면한 장애물은 정치적 의지의 부족, 간과, 책임성, 투명성, 협력과 참여, 분리된 업무 등 제도적 장벽이다. 추가적인 문제들로서 제한된 재정의 이용가능성이 포함된다. 더욱이 부채, 금융 불안정, 긴축 정책, 사회 서비스 제공에 대한 민간 부문의 개입과 관련한 문제들은 SDG 맥락에서 더 많은 연구와 실천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금융과 관련한 문제가 전반적으로 시민사회의 참여를 제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최대한 이용 가능한 자원으로 참여적이고 민주적인 예산 과정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목소리를 내지는 못하나 지구의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의 한 부분인 생명체 등 가장 소외된 존재에게 쓰이는 것이 중요하다.

누구도 배제하지 않기 위해서는 포용을 통해 사람들에게 자율권을 부여해야 한다. 그러나 SDGs 달성을 위한 비법으로 이것이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주목을 받지 못한 것이 속제이다. 지역차원의 실천은 바닥에서부터 지속가능한 실천을 문화에 접목시키는 새로운 규범이 될 잠재력이 있다. 그러나, 정치적 반발과 정부의 반발로 전 세계에 걸쳐 시민사회가 설 자리가 축소되고 있다.

## 제언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하기를 원하고 그럴 권리가 있다. 따라서 모든 이해 관계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행동을 취할 것을 요청한다.

1. 한 공동체 또는 인구집단의 요구사항들을 모든 목표의 중심에 두고 계획, 솔루션, 실천활동을 수립. 그리고 긴급한 사안과 장기적인 복원력 및 지속가능성 모두를 중심으로 행동을 실행하는 한편 이러한 과정에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
2. 복지 혜택과 역량을 펼칠 기회를 보장하는 시스템에서 제외된 사람들의 의견제시, 참여, 리더십 역량을 강화
3. 자기 비판적이고 반대의 목소리에도 기꺼이 귀 기울일 수 있어야 하며; 국가의 상황을 정직하게 말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의 자유를 보호
4. 의사결정 단계에서 다양한 시민 사회를 포함하고 다양한 관점을 존중
5. 엄청난 비율로 계속 불평등을 증가시키고 있는 현재의 개발 모델을 솔직하게 직시, 불평등을 증가시키는 현재의 금융 관행을 조사, 다국적 기업 비(非)우대에도 걱정을 하지 않을 정도로 최고 부유층에게 유리한 불공정한 조세 제도를 철폐, 불법적인 금융 흐름을 규제, 불평등을 줄이는 금융 메커니즘을 개발
6. 모든 단기적인 대응에 지역 중심의 장기적인 복원력 강화 시스템을 통합
7. 개발사업 권한을 지역사회 구성원들에게 이전. 이를 위해 역량강화가 필요한 지역의 경우, 개발을 지역 공급자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지역의 역량, 지혜, 문화, 지역 맥락에 맞는 사업을 평가하고 강화해 수행할 능력을 지원

## 남아있는 문제들

불평등이 빈번히 일어나는 세상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특히 주목한다는 것은 인권과 사회정의에 대한 문제이다. 확고하게 자리 잡은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취약 계층이

자기 나라의 경제, 사회, 문화, 정치 생활에 완전히 참여하지 못하는 구조적 장애요인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

우리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묻고자 한다.

- 사람들에게 자율권을 주고, 그들의 강점, 가치, 기여를 인식하며, 사람들에게 SDGs 를 달성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공하는 기량을 강화하고 있는가? 솔루션들은 사람들이 공동체에 소속감을 느끼게 해주고 계층, 인종, 민족성, 사회적 정체성, 기타 차이점들 간 연결성을 만들 수 있게 하는가?
- 실천계획의 설계에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관련되어 있는가? 누구의 목소리를 놓치고 있는가? 의사결정과정에서 어떻게 그들의 목소리를 가져올 것인가?
- 어떻게 하면 협업을 개선할 수 있는가?
- 어떻게 하면 데이터에 모든 사람들, 특히 외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나 소외된 집단의 경험이 반영되도록 보장할 수 있는가?
- 우리는 진정 지역사회의 요구를 경청하고 이해하고 있는가? 그리고 프로그램들은 그들의 요구에 실질적으로 부응하는가?
- 이러한 솔루션들은 사람들이 적절하게 돈을 벌며 가족을 돌보는 것을 방해하는 장벽들을 줄이고 없애는가?

인류는 현재 그 역사에서 연대(unite)라는 특별한 기회에 맞닥뜨리고 있다. 코로나 대유행에서 우리는 협력과 이러한 위기에 우리 모두가 직면할 필요가 있었던 모든 시민, 모든 사람들의 행동으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한다. SDGs 를 달성하려는 각 부문에 걸쳐 우리의 집단적 힘과 공동의 목소리 힘에 빛을 발할 수 있는 기회를 허비하지 말자.



**2020 고위급 정치포럼 NGO 그룹 입장문서 국문번역**

**발행일** | 2020.9.14.

**발행처** | 한국시민사회SDGs네트워크(SDGs시민넷) (사무국: (사)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www.sdgforum.org](http://www.sdgforum.org)

**감수 및 편집** | 윤경효 (사)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초벌 번역** | 한국지속가능청년플랫폼(이세빈, 정연우, 이향기, 문선우, 고수민, 조소현, 이승언, 김가현, 조다연, 이서연, 김성주, 신민정, 정예린, 이태호, 이상은, 김효주, 박신영, 장유영, 김규령, 홍석운, 김자영, 김서연, 김동조, 현채영, 이준우, 김도희)

**문의** | (사)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Tel. 02-706-6179 / Email. [kicsd.re.kr@gmail.com](mailto:kicsd.re.kr@gmail.com)